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移植過程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계의 현실이었지만, 나름대로의 主體的 受容의 흔적도 상당히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앞에서 지적한 현상, 즉 우리 經濟學界의 거의 1/3에 가까운 사람들이 國際經濟學이나 發展理論을 전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와 같은 주체적 수용의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專攻別人的 構成은 先進諸國의 經濟學界 어디서도 찾아 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학계가 외국의 경제이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經濟的 狀況이 요구하는 바를 감안하여 分野別의 輕重을 구분하였다는 뜻이 된다. 아무리 韓國的인 經濟學을 강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경제학자 거의 전체가 發展理論을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西歐經濟學의 盲目的 移植에 대한 우려는 이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점, 네컨대 分析道具라든가 接近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專攻選擇에 있어서 우리 경제학계가 보였던 태도가 역시 분석도구나 접근법의 선택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 것이나, 다음 節에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2. 韓國 經濟學界의 課題

韓國 經濟學界가 안고 있는 과제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社會·經濟的 現實에 알맞는 自主的인 經濟學, 말하자면 韓國的 經濟學의 定立이라는 데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節에서 따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 밖의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우선 첫째로 經濟學者間의 公式·非公式的 交流를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研究의 活性化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각 분야에 學會가 속속 구성됨으로써 경제학자간의 교류의 기회가 매우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學界의 분위기를 보면 상호간의 교류는 매우 희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예컨대 外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미나가 우리의 大學이나 研究所에서는 무척 드물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미나나 심포지움이라고 불리워지는 行事が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外樣만 번드르한, 단지 행사만을 위한 행사에 그치는 경우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한 學者가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스스로의 主導下에 행한 가장 最近의 研究結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듣는 場이란 의미에서의 진정한 세미나가 몇이나 되는지

우리 주위를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主催측이 이미 선택한 主題에 이리저리 사람들을 께어 맞춘 行事性的 심포지움이나, 研究의 現場에서 이미 멀어진지 오랜 過去의 人物들을 초청한 세미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요즈음 우리 學界에서 少壯 學者들을 중심으로 한 分野別 研究모임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들 모임은 公式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힘들기는 하지만, 몇몇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활성화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번째의 과제로는 學界의 交流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보다 開放的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閉鎖性이 우리 經濟學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各 大學은 대학대로, 研究所는 연구소대로 서로들 높은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우리 학계에서는 競爭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善意的 競爭이라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각자가 자신의 영역만을 신경질적으로 지키려하고 있다는 표현이 알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閉鎖性의 단적인 예로서 筆者는 우리 經濟學界에 서로 교류하지 않는 두 그룹의 경제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고자 한다. 한 그룹은 多數를 점하고 있는 主流經濟學的 性向의 경제학자들이며, 다른 한 그룹은 政治經濟學的 性向의 경제학자들이다. 이들 사이에 교류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學會의 경우에도 前者는 韓國經濟學會에 주로 모여 있는 반면, 後者는 韓國社會經濟學會에 주로 모여 있어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兩者가 각각의 獨自的인 接近法을 포기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상대방을 인정하고 때로는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接近法만이 유일하게 적합한 것이라는 독단적인 태도가 젊은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筆者는 우리 學界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經濟學者를 대표할 수 있는 모임, 즉 學會 정도는 최소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⁹⁾ 만약 學問的 性向의 차이로 말미암아 갈

(9) 이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계에 主流經濟學的 立場을 대표하는 一般的인 성격의 두 학회, 즉 韓國經濟學會와 韓國國際經濟學會 사이의 位相 再定立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은 학회에 속하는 것마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격의 학회는 단지 서로 다른 성향의 학자들이 같은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象徴的인 의미보다 더욱 實質的인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방의 批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인다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요한 前提條件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건전하게 批判하고,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成熟性을 우리 스스로가 갖추는 일이다. 이 전제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그와 같은 모임을 짜맞춘다면 상호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지도 모른다.

세번째의 과제로는 각자의 研究成果가 客觀的으로 評價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 學界의 전반적인 수준과도 연관되는 현상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연구성과 중 어느 것이 훌륭한 것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풍토가 모든 사람에게 唯我獨尊의 自己滿足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연구의 質的 向上에 크게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연구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료들에 의한 엄정한 평가라는 刺戟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성과 평가의 客觀的인 基準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현존하는 學術誌 중 대부분이 그것을 發刊하는 大學이나 學會 또는 機關의 構成員이면 누구나 글을 실을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레퍼리(referee)의 엄정한 審査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레퍼리制度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우 形式的인 審査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客觀的인 評價의 風土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우선 우리 學界의 전반적인 水準向上과 더불어 學者層이 보다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학계가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기 보다는 能力不足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쪽이 더 옳을 것이다. 또한 학자의 層이 너무 얇아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人間的인 關係를 떠나 客觀的으로 평가를 해야 할 制度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풍토가 불식되지 않고서는 研究의 質的 向上을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研究界風氣의 改善도 우리 經濟學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당면과제로서 지적

각한다. 두 학회가 並存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새로이 學界에 발을 디더 놓은 사람에게는 비슷한 성격의 두 단체가 영겨주출한 상태로 병존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學問分野에서 다 그렇듯이 韓國의 經濟學者들은 지극히 劣惡한 연구분위기와 씨름하고 있다. 연구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선 參考圖書의 측면에서 볼 때 소수의 政府出捐研究機關을 제외하면 主要 學術誌조차 번번하게 구비해 놓은 大學·研究所들을 찾아 보기 힘들다. 특히 大學의 경우는 圖書館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學生들의 自習室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함을 볼 수 있다. 보고자 하는 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흔한 상황에서 研究에 대한 意欲이 제대로 살아날리 없다.

經濟學者들을 차분히 연구에 몰두하게끔 놓아 두지 않는 사회분위기도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大學의 경우 과중한 授業 및 學生指導의 부담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大學行政의 측면에서 옛기는 시간도 적지 않다. 이 점은 비단 經濟學 뿐 아니라 모든 學問分野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經濟學 教授로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社會의 이곳 저곳에서 이들을 불러 내어 조용히 연구에 몰두해야 할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매스컴, 政府 그리고 民間部門이 모두 저마다의 필요에 의해 경제학 교수들을 밖으로 불러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제학이 社會科學인 이상 사회와 어느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준다.

또한 研究機關에 종사하고 있는 經濟學者의 경우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政府出捐의 연구기관의 경우도 그렇고 私設의 연구기관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당장에 떨어지는 課題에 묶어 뚫으로써 이들에게 기본연구를 할 시간적 여유를 남겨주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출연의 연구기관이라고 할 때 國民들의 稅負擔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政府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주된 義務라고 말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近視眼的의 태도를 취하여 研究陣을 각 부처의 政策課題 開發에만 묶어 놓고 이들로 하여금 기본적 연구를 통한 再充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연구기관의 효율성 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近視眼的의 태도는 私設의 研究機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면의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긴 눈으로 연구기관을 운영해 가는 經綸이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利益의 追求가 기본목표로 되어 있는 기업에게 經濟學 그 자체의 연구를 위해 거액을 투자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나, 보다 긴 눈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經濟學研究의 분위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實證分析의 토대가 되는 각

중 經濟統計資料의 可用性이 지극히 制限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官僚들의 과도한 情報獨占欲 내지는 無事實逸主義를 지지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統計資料의 수집·공개는 정부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有用한 外部性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통계자료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통계자료가 官僚들의 積善저택에서 낡감을 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과 특별한 연줄이 없이 필요한 자료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척 드물 것이다.

以上에서 韓國 經濟學界가 안고 있는 課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두서없이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移植段階를 탈피하고 自立的인 經濟理論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學界가 이 劃期的인 轉換點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V. 韓國 經濟學 定立의 課題

「韓國 經濟學」 혹은 「韓國的 經濟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간에 우리 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自主的인 理論體系 定立의 當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西歐經濟學의 模倣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점일 것이다. 歷史, 文化 그리고 制度의 背景이 다른 사회에서 생성된 경제이론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합해질 가능성은 당연히 희박한 것이며, 그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經濟學의 失敗」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즉 模倣의 段階를 채 벗어나지 못한 韓國의 經濟學界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 적합한 對답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冒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학계에 新古典派綜合의 이론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는 아직 40년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역사에서 훌륭한 理論的 成果를 기대한다는 것이 조금 성급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模倣의 段階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學問的 風土를 自嘆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 왔다.

(10) 예컨대 金秉柱 教授(1983)는 i)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 ii) 韓國 經濟學者들의 經濟學, iii) 韓國 經濟問題를 다루는 學問, iv) 韓國 經濟學者들이 공헌한 理論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自省의 움직임이 분명 필요한 것이며, 이제 우리 학계도 舊殼을 벗고 새로운 自主的 學問風土를 이룩하고자 일어선 메라는 사실을 굳이 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단순히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感傷的인 主張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의 準備와 적합한 節次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 節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學界에 國際經濟學과 發展理論은 專攻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일단 우리 나름대로 西歐의 經濟學을 主體的으로 受容하고자 노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전공을 일일이 선택하여 강제하지 않았어도 우리 經濟의 狀況에 대한 인식은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分野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전공분야의 선택에서뿐 아니라 研究主題의 선택에서 역시 이와 비슷한 主體的 受容이 분명히 일어났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을 엄밀하게 입증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經濟學者가 쓴 논문의 題目을 모아놓고 이를 外國의 經濟學者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서로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經濟學者도 合理的인 人間인 이상 자신의 연구결과가 동료 경제학자, 그리고 일반 사회에 의해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研究主題를 선택하는데 있어 그 사회의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배탈릴 이유가 없다. 사회의 문제의식과 동떨어진 주제만을 고집하며, 그와 같은 고집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집이라면 결코 만족할 만한 學問的 報償이 돌아갈 리 없다.

말하자면 經濟學 內部에서 問題意識의 自然淘汰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학계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당연히 일어났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경제학계에서만 유독 이같은 자연도태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학계가 유독 관대했거나 혹은 時流에 둔감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筆者는 두 가지 경우 중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專攻分野의 선정이나 研究主題의 선택 등에 반영된 問題意識에 있어서 韓國 經濟學者들은 나름대로의 自發性과 主體性을 보여 온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方法論에 있어 西歐經濟學의 것을 無批判的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나, 韓國經濟에 대한 診斷이나 處方이 매우 誤導된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점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方法論上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기로 하자. 理想的인 狀況下에서 완전하게 작용하

는 市場機構를 전제로 하고 있는 主流經濟學 혹은 新古典派綜合의 이론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 이론체계가 형성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西歐 先進經濟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전제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이론체계가 각종의 不完全性 혹은 硬直性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經濟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韓國의 經濟學者들이 이점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야기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 원인은 認識의 不足보다는 能力의 不足에 더 크게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상황이 西歐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經濟에 적합한 方法論을 개발해 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挫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韓國 經濟學界의 現住所였을 것이다.

能力이 부족한 것의 원인을 따져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經濟學研究의 역사가 日淺하다는 점 이외의 것이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의 努力不足을 自省하는 목소리는 스스로 분발하게끔 하는 자극을 주어, 보다 빠른 속도로 能力을 培養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學問의 成熟에는 年輪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韓國의 經濟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지 불과 2, 30년만에 中進國의 대열에 걸 수 있었던 소위 「壓縮成長」이 經濟學의 發展에도 그대로 再現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筆者가 구태여 이 점을 강조하여 역설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단순한 自己辯明을 통해 우리 經濟學界의 一員으로서 느끼는 自責感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결단코 그와 같은 의도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학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方向을 바로 定立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認識이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韓國 經濟學界의 理論的 能力에 대한 自體評價가 약간 과장되게 이루어진 점이 있어 올바른 時間表가 찾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不正確한 現實認識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불필요한 挫折感에 빠진다는 류의 값싼 열려 때문이 아니다. 부정확한 현실 인식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學界가 할 일, 그리고 가깝고 먼 將來에 할 일 등의 순서가 바람직하게 잡혀져 있지 못하고 있다는 보다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不正確한 현실인식 때문에 韓國 經濟學 定立이라는 과제가 성취되는 날이 더욱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筆者는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이론체계라는 의미에서의 韓國 經濟學의 定立은 우리가 지

급 도입해서 배우고 있는 西歐經濟學의 이론체계를 철저히 克服한 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라고 믿고 있다. 主流經濟學의 이론체계내에는 그것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西歐의 社會·經濟라는 特殊한 요소와 이것을 뛰어넘는 普遍性的의 요소가 미묘하게 混在되어 있다. 우리가 이 이론체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자 할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론체계에서 西歐的인 특성을 대표하고 있는 부분을 韓國的인 시각에서 批判的으로 受容함으로써 盲目的인 模倣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자세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이론체계에서 普遍的인 요소와 特殊한 요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대한 高度의 理解를 필요로 한다. 그 이론을 설익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兩者의 정확한 구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결국 西歐經濟學의 批判的 受容은 서구경제학에 대한 철저한 理解가 있는 다음에야 성취될 수 있는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학계가 서구경제학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큼 成熟되어 있는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견해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면 우리의 當面課題는 성급하게 韓國經濟學의 정립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西歐經濟學의 導入時代를 마감할 수 있는 知的 蓄積에 힘쓰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 手段的인 의미에서 西歐經濟學의 이론체계를 완전히 消化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보다 적합한 전략이 된다는 말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작업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健全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經濟學의 教育이나 研究에 있어서 韓國的인 特色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的인 것에 대한 강조가 지나친 나머지 우리에게 의해서 개발되지 않은 모든 이론을 애초부터 아예 배우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큰 得이 되지 않는다. 물론 外國의 이론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우리의 현실에 알맞는 이론을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하나의 戰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戰略은 매우 費用이 많이 들 뿐더러 危險스럽기도 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筆者는 西歐經濟學을 더욱 철저히 消化시킨 바탕 위에서 이의 克服을 통한 韓國經濟學의 定立이라는 戰略的 코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經濟學界가 제시한 韓國經濟에 대한 診斷이나 處方이 매우 誤導된 것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와 같은 지적은 결국 지난 2, 30년간의 韓國經濟 成長經路에 대한 評價와 맞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主流經濟學的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戰略의 選擇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문제점이란 다름아닌 分配에 있어서의 公平性의 문제이며, 效率性에만 경도되어 있는 주류경제학의 문제의식이 公平성에 대한 배려를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主流經濟學에 있어서 公平性의 측면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는 이의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不公平性의 문제마저 주류경제학의 이론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지난 2, 30년의 기간 동안에 主流經濟學의 接近方法을 쓰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成長—邊倒의 發展戰略에 박수를 보내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 중에도 우리 사회가 成長뿐만 아니라 分配에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입이 닳도록 역설해온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政策立案者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先入見과 일치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데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견해를 正當化하는 데 편리하게 經濟學者들을 利用했을 뿐이다.

물론 오늘의 經濟現實에 대해 經濟學者가 책임질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옳을 것이다. 그것이 功이 되었든 過가 되었든 많은 경제학자들이 政策決定過程에 깊숙히 관여해 온 이상 그 정책의 귀결에 대해 당연히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은 이들이 내놓은 政策處方이 主流經濟學의 이론체계에서 의당 나와야 할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主流經濟學에서 公平性에 관한 이론화가 될 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의 정책에 있어서도 公平性의 문제를 무시해도 좋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健全한 常識의 소유자라면 理論에 적합한 修正을 가하여 현실에 적용시켜 보려고 할 것이지 그대로 적용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經濟學界가 이러한 常識을 缺如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理論 그 자체의 失敗와 결부시켜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筆者가 이 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長期的인 眼目을 가지고 韓國 經濟學의 定立이란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우선의 當面課題는 우리의 理論的인 힘을 배양하는 것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西歐經濟學이 결국은 克服의 對象이 될 것이지만 일단은 이를 완전히 消化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西歐의 경제학이라 하여 처음부터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보다 有利한 戰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급하게 韓國 經濟學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知識의 蓄積없이 하루 아침에 이

투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인식하고 後學들에게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誤解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西歐의 經濟學이라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現實問題에 대한 思考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맹목적으로 서구경제학만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실문제에 대한 健全한 批判意識이 항상 우리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추호의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또한 直輸入한 西歐의 經濟理論을 우리 경제현실에 막바로 적용하려는 무모함에도 충분한 경계가 있어야 하겠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이론적인 힘의 배양없이 성급하게 현실문제에만 매달린다면 진정으로 바람직한 韓國 經濟學이 정립되는 날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란 점이다.

V. 맺 음 말

西歐經濟學이 처음 이 땅에 소개된지 100년이 채 못되고, 본격적인 敎育과 研究가 시작된지 40년이 채 못되는 이 時點에서 그 동안 韓國의 經濟學界는 커다란 成長을 달성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模倣에 급급했던 지난 날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自主的인 이론체계의 정립까지 논의될 정도로 성숙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韓國 經濟學界가 안고 있는 숙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世界 經濟學界의 發展과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自主的인 「韓國 經濟學」을 定立해야 하는 二重의 負擔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日淺한 歷史와 微弱한 能力을 가지고는 그 둘 중 하나도 추진하기가 벅찬 터에, 우리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經濟學界 內外의 壓力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학계를 精神分裂症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즉 西歐經濟學을 계속 배워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經濟現實에 꼭 부합되는 이론은 아닌 것 같다는 회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에만 全力投球를 해도 힘이 벅찰텐데 外國의 理論을 그냥 배워와서만도 안되고 이것을 우리 體質에 알맞게 재단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는 확실히 힘에 겨울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름길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목표, 즉 自主的인 韓國 經濟學의 이론체계로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學問에는 王道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확립된 이론체계를 모두 消化・吸收하고 이를 발판으로 더 높은 이론의 경지

로 오르는 길만이 유일한 正道일 뿐이다. 이와 같은 바른 길을 걷지 않고 막바로 韓國 經濟學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어 놓고 말 위험이 있다. 世界 經濟學界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韓國 經濟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世界의 學界와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통하는 경제학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世界 經濟學의 潮流에 뒤어들되 맹목적인 모방이 아닌, 自主的인 자세로의 한 次元 높은 참여를 시도하는 것이 韓國 經濟學에 관한 논의의 참뜻이라고 생각한다. 이 認識은 많은 사람이 共有하고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와 같은 궁극적인 과제를 향한 當面의 현안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글에 개진된 筆者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우리 경제학계의 當面課題가 西歐 經濟學의 이론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소화·흡수함으로써 模倣의 時代에 막을 내리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모방의 단계를 완전히 청산할 만큼의 충분한 自生力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같은 판단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하간 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명확한 現實認識에 도달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만약 제각기 판이하게 다른 현실인식을 견지하게 된다면 결국 앞날의 課題에 대해서도 의견의 충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쓰면서 줄곧 西歐 經濟學은 바로 主流 經濟學 혹은 新古典派綜合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우리 경제학계가 마치 이 接近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일색인 것 같은 느낌을 준 데 대한 사과의 말이다. 우리 경제학계에 政治 經濟學 등 다른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筆者의 無知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없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급한다는 것이 缺禮일 것 같아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그 존재를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계에서 主流 經濟學의 接近法과 政治 經濟學의 接近法 사이의 相對的 位相의 문제가 증대한 과제임을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바가 없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 글의 限界는 너무나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姜命圭, 「韓國經濟學的 批判的 省察」, 『韓國經濟學的 諸問題』, 전예원, 1983.
——, 「韓國經濟學的 成長構造」, 『經濟論集』, 1987.
- 金秉柱, 「韓國經濟學的 現況과 課題」, 『韓國經濟學的 諸問題』, 전예원, 1983.
文教部, 『文教統計』, 1988.
- 邊衡尹, 「韓國的 經濟學的 定立方向」, 『韓國經濟學的 諸問題』, 전예원, 1983.
——,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教育의 課題」, 『韓國經濟學的 諸問題』, 전예원, 1983.
- 申泰煥, 「韓國經濟學 50年의 回顧」, 『韓國經濟學的 諸問題』, 전예원, 1983.
- 柳莊熙, 「經濟學博士들 : 과연 供給過剩인가」, 韓國經濟學會(編), 『國際韓國人經濟學者 學術大會論文集 (Ⅱ)』, 1986.
- 李基俊, 『資料 韓國經濟學 發達史』, 1980.
- 林鍾哲, 「經濟學研究 40年」, 『서울大學校 學問研究 40年 (Ⅰ)』, 1987.
- 趙 淳, 「韓國經濟學論」, 『韓國經濟學的 諸問題』, 전예원, 1983.
- 韓國經濟研究院, 『韓國經濟學的 摸索』, 1983.
- 韓國學術振興財團 編, 『學會總覽』, 1988.

〈討 論〉

林鍾哲教授*의 論評

1. 전공과목의 추이를 다루면서 經濟學方法論이 개설된 일이 없음을 논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다. 「경제원론체계가 바로 경제학방법론이므로 별도의 과목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는 사회과학의 女王을 자부하는 경제학자의 오만의 표시일 뿐이다. 경제과학은 방법론없이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哲學的, 科學的 基礎가 취약한 학문이 결코 아니다.

2. 마르크스경제학을 정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 커다란 발전(傍點 論評者)이라고 하나 이는 단순한 변화일 뿐 발전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진정한 경제학발전은 主流經濟學과 마르크스經濟學을 포함한 非主流經濟學이 자신만이 유일한 사회과학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다른 接近도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학문태도가 확립될 때 시작될 수 있다. 진리는 唯一하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여럿일 수 있으며 어느 길, 어느 방법이 과학적, 경제적인가를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하고 서로의 주요 分析道具를 유용한 것이라면 경제학공통의 재산으로 삼을 때 학문발전이 있는 것이다. 서로를 과학으로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없는 한 相異한 두 體制라는 客觀的 實在가 엄연하고 異體制의 合一이란 실천적 따라서 학문적 과제를 갖는 한국에서 발전키녕 변화조차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국의 경제를 소재로 한 교육자료가 더욱 풍부해져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모든 교과서에서의 例 특히 數學例를 한국경제의 실재를 토대로 만들 정도의 경성을 모든 교과서 저작자는 갖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甲國, 乙國 또는 의미없이 한국, 미국 할 것이 아니라 原典에 있는 數學例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학문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 경우 한국경제의 실재는 몰라도 적어도 古典을 읽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4. 경제학분야의 학술단체의 수적 증가를 경제학계의 量的 成長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경제학자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흔히 將軍(general)은 문자 그대로 兵科가 없다고 하지만 학문의 大家 역시 道가 통하면 專攻이 없어진다. 그런데 한국 경제학자는 老少의 구별없이 모두 大家가 되어 온갖 學術에 중복가입하고 있다. 그 甚한 예가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國際經濟學會인데 某人은 「국제경제학회는 국제경제학자의 학회가 아니라 국제적 (명성을 지닌) 경제학자의 학회」라는 暴言을 서슴치 않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理論에 대한 神聖褻瀆이고 학문적 순수성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경제학의 양적 성장이 「모든 주요 분야가 하나의 학회에 의해서 대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모름지기 경제학도는 1차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와 합치되는 학회의 회원이 되고 각 전문학회는 聯合體인 한국경제학회의 구성학회가 되는 절차를 통하여 한국경제학회의 회원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는 醇化作用이 있어야 한다. (절차는 어쨌든 중요하지 않다.)

5. 전공분야별 인원구성과 관련하여 국제경제학전공자가 154명으로 전체 682명의 22.6%가 되는 사실을 놓고 李교수는 경제학자가 (수출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과제를 主體的으로 이해한 좋은 징후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李교수가 man on the spot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린 그릇된 해석이다. 1960년대 특히 그 중반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가 과연 그러하나에 대한 성찰·이론적 검토없이 정부가 계획적 개발이라고 하면 계획의 당위성을 읊조리고 수출주도형경제라면 무조건 이에 부화뇌동했다. 1960~1970년대의 현역경제학자중 경제계획, 경제발전, 무역에 대한 論文을 한편도 안쓴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들중 比較優位에 관한 Ricardo의 數學例를 옳게 이해하고 즉각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국제경제학 및 경제발전 이론분야에 교수수가 많은 것은 1960~1970년대에 이 두分野에 연구비가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과 결코 無關하지 않다. 일찌기 太完善경제기획원장관은 한국경제를 官給性經濟라고 말했지만 李교수論文 <表 6>의 사실은 한국경제학계의 官給性, 한국경제학자의 御用性, 官學 complex의 증거일 뿐 주체성의 증거는 아니다.

6. 한국경제학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는 한국경제학파이어야 하고 좀 더 정확히는 Sweden학파가 사실은 Stockholm학파이고 Austria학파가 Vienna학파이듯 한국경제학파는 사실은 서울학파(서울대학파가 아니라 우수한 대학이 집중된 서울특별시학파를 말함) 좀 더 좁게는 安岩학파, 西江학파 등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아무리 理論의 prediction 기능을 강조하지만 현상이 앞선 다음 설명원리인 이론이 나오고 그 토대위에 豫測이 나오므로 開途國에서 獨創的 理論이 나오기는 힘들다. 그러나 K. Wicksell(1851~1926)이 Stockholm학파를 창설할 당시의 Sweden, T. Veblen(1857~1929)이 制度學派를 기초지을 때의 미국에 비하여 지금의 한국이 경제발전의 질대적·상대적 수준, 경제학도의 수와 그 學問的 力量에 비추어 크게 뒤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학문派를 창시할 수 없는 無能力은 理論的 分析技法의 無能力보다는 경제학도들이 아직도 완전히 拂拭하지 못하고 있는 御用性, 買辦性에 기인하는 바 더 크지 않은가 염려한다.

韓成信教授*의 論評

이준구교수는 한국경제학 교육과 연구의 현황을 솔직하게 또한 명쾌하게 분석해 냄으로써 경제학계 현 주소를 인식함에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학이 한국적이기 위해서는 西歐的 經濟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토론자도 동감하고 있으며 특히 소위 주류와 반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 대화의 부재를 지적한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모리시마(1974a)가 일본의 경제학계에서 主流와 反主流의 性格을 「도당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양대 산맥은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경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논문이 經濟學 教育과 研究의 供給側面만 분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교육에 대한 需要側面도 고려한다면 보다 포괄적 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학생 수요측면 변수로서는 경제학 과목의 수강생 현황 또는 경제학교수 1인당 수강생 수 등을 꼽을 수 있고 사회적 수요로서는 각종 시험에서 경제학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대한 社會的 需要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에 대한 자료의 제시는 어렵더라도 의견의 개진정도만이라도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끝으로 方法論에 관하여 보면, 이 논문에서는 韓國的 方法論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市場經濟에 대한 분석을 예로서 들고 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분석으로서 애로우—드브류 경제가 있다면 균형의 개념상 문제와 가정의 현실성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論理展開 方法論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균형이라는 개념이 한국적이 못된다면 불균형 또는 코르나이의 반균형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¹⁾ 필요하다면 한국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政治經濟學的 方法論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均衡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²⁾

*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불균형과 반균형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이형순(1977) 논문을 참조할 것.

2) 마르크스 경제학의 일반균형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모리시마(1974b, 1980), 페트리(1980), 로머(1980) 논문을 참조할 것.

참 고 문 헌

- 이형순, 「均衡·不均衡·反均衡理論의 方法論」, 『경제논집』, 1977.
- Morishima, M., *Value, Exploitation and Growth: Marx in the Light of Modern Economic Theory*, McGraw-Hill, 1974(a).
- _____, "Marx in the Light of Modern Economic Theory," *Econometrica*, 1974 (b): 611~32.
- _____, "Positive Profits without Exploitation: A Comment on F. Petri's Note," *Econometrica*, 1980:535-6.
- Petri, F., "Positive Profits without Exploitation: A Note on the Generalized Fundamental Marxian Theorem," *Econometrica*, 1980:531-4.
- Roemer, J.,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to Marxian Economics," *Econometrica*, 1980:505-30.